

III. 主要 政策 解說

- 재정경제원, 「저축 증대를 위한 조세 지원 강화 방안」 마련 (2.21)
 -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부유층의 저축 증대를 유도
 -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속·증여세가 전액 면제되고,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장기 저축 상품 도입
- 해양수산부, 「EEZ에서의 주관적 권리 행사 시행령」 입법 예고 (2.24)
 - EEZ 내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선박 톤당 1,000원의 기본 입어료와 어종별 어획량에 따라 추가 입어료 지불
- 정보통신부, 「신규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 요령」 확정, 발표 (2.26)
 - 제2 시내전화와 제3 시외전화 사업자의 일시 출연금이 각각 860억 원과 490억 원으로 대폭 경감되며,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 허가때 사전 공고제를 폐지
- 건설교통부, 서울 및 수도권에 신규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(2.27)
 -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 목적이며, 서울 수색, 경기 용인 등 8개 지구에 300만 평으로 전원형 미니 신도시 개발
- 통상산업부, 「수입선 다변화 규제」 완화, 다음달부터 시행 (3.2)
 - 수입선 다변화 품목중 수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11개 품목은 수입승인서 없이 관련 단체의 수입 추천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
- 재정경제원, 현행 「조세 감면 규제법」 대폭 개편, 99년부터 시행 (3.7)
 - WTO 및 OECD가 요구하는 조세 규범에 맞도록 중장기 세제 발전 방안 마련
 - 수출 및 수입 대체를 촉진하기 위한 준비금을 98년까지 폐지하고, 조세감면법 상 내·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정을 대폭 정비
- 공정거래위원회, 「대기업 계열 분리 요건」 완화 (3.12)
 -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사실상 독립 경영 중인 그룹 계열사의 분리를 촉진
 - 계열 비상장사의 지분 상한선을 당초 10%에서 15% 미만으로 대폭 완화
- 재정경제원, 「은행의 중장기 차입에 대한 연간 한도 규제」 철폐 (3.14)
 - 외환 부족 사태 해결과 환율 안정이 목적이며, 동시에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해외주식연계증권 발행 한도를 폐지